

폐배터리 용도·수요 확대… 재활용규제 풀어 ‘파이’ 키운다

新 EU배터리 규제현황·대응전략
코발트 재활용률 16→26% 확대
리튬 6→12%, 니켈 6→15%로
EU, 회수율 확대 CRMA 곧 발표

성일하이텍

“9개 리사이클링파크 등 보유
자재확보 위해 글로벌체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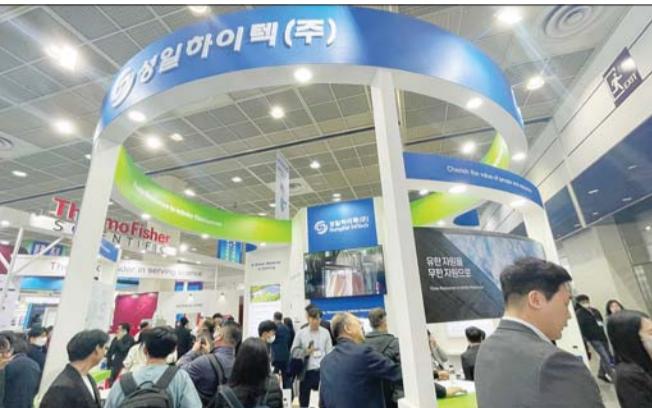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CRMA)’이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배터리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만큼이나 폐배터리의 용도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 CRMA 앞세워 배터리 재활용 중요 시하는 EU

조르지오 코르베타 유럽 배터리 제조



조르지오 코르베타 유럽 배터리 제조연합, 유럽연합(EU) 담당 사무국장이 16일 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온라인 원격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인터배터리 2023에 참여한 성일하이텍 부스에 관람객들이 몰려있다.

/허정윤 기자

연합(EUROBAT), 유럽연합(EU) 담당 사무국장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더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신(新) EU 배터리 규제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는 “배터리에서 코발트 재활용 비중은 2031년 16%에서 2046년 26%로 늘어날 것”이며 “리튬은 6%에서 12%

로, 니켈은 6%에서 15%로 비중으로 재활용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곧 CRMA 초안을 발표한다. 이 법의 골자는 EU가 추진하는 CRM A는 역내에서 최소 10% 이상의 원자재를 조달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해 원자재 회수율을 높이는 것. 재활용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규제’로 인해 더이

목을 끌고 있다.

조르지오 사무국장은 “2031년 배터리 소재 중 재활용 의무 물질과 비율은 85%(납), 16%(코발트), 6%(리튬), 니켈(6%)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범위는 EU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광범위하다”며 “배터리 생산 업체가 회수 및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실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방법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방법 연구 ▲배터리 생산자들의 책임 인식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르지오 사무국장은 “EU의 원자재 전략은 ‘로컬화’된 배터리 원자재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정리했다. 그는 “배터리 및 배터리 금속 가공은 하나의 시장이 아닌 여러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장 점유 서두르는 ‘K-재활용 배터리’

배터리 재활용 시장 선도를 위해 한국 기업들도 앞장서고 있다. 성일하이텍 염광현 상무는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어떤 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든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성일하이텍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이다. 성일하이텍은 국내 배터리 3사와 협력하며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성일하이텍은 리튬회수와 전처리 특허도 23개(2022년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일괄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이 유일하다. 글로벌 단위로는 중국 재활용업체 3곳과 유럽의 유미코아(Umicore)가 갖추고 있다.

염 상무는 “성일하이텍은 작년 기준 9개의 리사이클링 파크(전처리)와 2개의 하이드로 센터(후처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리사이클링 제품 다변화를 시도하고 원활한 자재확보를 위해 글로벌 체인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 인도 등에서 글로벌 리사이클링 파크 설립을 시작해 공급처를 분산시키며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아이에스티엠씨(ISTMC)는 전국 최대규모의 폐차 네트워크를 지난 ‘인선모터스’와 경기도 화성에 2500평 규모의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는 ‘아이에스 비엠 솔루션’과 리사이클 밸류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이에스티엠씨는 199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철금속 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폐리튬 이온 이차전지 재활용을 시작해 이차전지 스크랩으로부터 탄산리튬과 전구체복합액(니켈·코발트·망간 혼합용액)을 양산하며 국내 희유금속 리사이클링 산업을 이끌어왔다. 양극재와 전구체의 폐슬러지를 포함한 종합 이차전지 폐스크랩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다. 이 밖에도 제련기술로 완성한 고효율 습식 리사이클 공정이 가능한 고려아연 등이 배터리 재활용에 뛰어들고 채비 중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시대를 앞서 가는 시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한화생명의 시선은
모든 방향으로 향합니다

한화생명



www.hanwhalife.com

“은행 수익개선, 금리인상 기반 실질 성과따라 성과급 줘야”

금융위, 은행권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작년 5대 시중은행 이자이익 37조
2020년 27조 대비 36.7% 급증

경기 불확실성 대비 단·장기적 성과
평가하고, 지급수단 다변화 해야

“최근 은행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 노력보다는 대출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36조9388억원으로 2020년(27조209억원)과 비교해 3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9조9186억원에서 10조7991억원으로 8.8% 늘었다. 고정급은 5조1718억원에서 5조4044억원

으로 4.4%, 성과급은 1조4747억원에서 1조9595억원으로 32.8% 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을 이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 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용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성과보수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